

공보처 유선방송추진방안 밝혀

정부가 종합유선방송(케이블 TV)사업 추진을 위한 구역분할안 등을 마무리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.

지난해 상반기 종합유선방송사업법 시행령이 확정·통과되고도 정치권 일각의 케이블 TV 사업의 전면재검토 주장 등으로 사업공고일이 계속 늦추어져왔다. 특히 95년 무궁화위성 발사로 직접위성방송시대가 열리면, 큰 시간차없이 도입되는 종합유선방송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동축케이블 설치 등을 해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는 지적도 나왔다.

그러나 지금까지 소극적인

◇ 종합유선방송 구역분할 및 단계별 허가방안=지역매체로서의 특성과 종합유선방송사의 사업성 등을 고려해 1개 구역당 10만가구를 원칙으로 전국을 분할했다. 전송망시설 투자능력이나 기자재 국산화 전망 등을 감안해 대도시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허가하되 초·기단계에 일정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.

1단계 허가방안은 △대도시 전역(44)과 특별·직할시가 인접하지 않은 도의 도청소재지(4), 각 도의 시범지역(9) 등 57개안 △대도시 26개와 4만 가구 이상인 시 29개 등 55개

을 비롯해 영화 음악 종합스포츠 중고생교육 성인교육 교양 다류 가정오락 문화예술 어린이 종교 여성 등 18개 분야를 확정해 10~20개의 채널을 운영한다. 또 신청희망업체가 많은 분야는 공급능력이 인정되면 복수로 허가해줄 방침이다. 방송시간도 프로그램공급자의 능력에 따라 24시간 종일방송도 가능케 했고, 채널 송출 시간 역시 공급자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.

또 현행 10%로 돼있는 기존 공중파방송의 외주제작비율을 매년 5%씩 올려 95년까지 법정한도 20%이상으로 늘리는 등 독립프로덕션의 육성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방송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방송전문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

사업자 연내선정 95년 방송시작 1구역당 10만가구 원칙으로 전국분할

자세에 머무르던 공보처가 이달 들어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장기일정과 구체적 정책안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.

공보처는 먼저 지난 6일 '케이블 TV 도입의 필요성'에는 더 이상 이론이 없으며 정부가 마련한 정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다음달중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공표하겠다"며 "올해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95년초에는 방송을 시작한다"고 밝혔다.

공보처는 이어 '케이블 TV 사업, 어떻게 할 것인가?'라는 큰 주제 아래 5회연속 진행된 방송개발원의 토론회에서 종합유선방송 구역분할 및 단계별 허가방안 등 5개 소주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.

이를 주제별로 요약한다.

안 △대도시 17개와 3만가구 이상인 시 34개 등 51개안 △대도시 26개와 도 10개 등 36개안 등이 검토중이다.

종합유선방송사 운영자가 사업성이 높은 곳에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전망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사업권을 '패키지'로 묶어 허가신청을 받을 방침이다.

또 프로그램의 편성권과 광고권은 프로그램 공급자가 갖도록 할 방침이며 방송사 운영자는 일부 지역광고와 채널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다.

◇ 채널구성 및 프로그램 육성방안=채널수는 10~20개로 정하고 방송시간은 채널별로 제작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.

곧 60개의 가용채널중 우선 1단계로 종합 및 경제뉴스채널

토종이다.

이밖에 프로그램공급업자의 자체제작비율은 20%, 외국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30% 범위 안에서 추후 고시하기로 했으나 외국프로그램의 편성은 한미통상협상 결과에 따라 다소 상향 조정될 수 있다.

◇ 사업전망=종합유선방송사는 10만가구 기준으로 가입률이 20%에 이르는 5~7년 정도면 수익분기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. 이때쯤이면 최소한의 광고시장이 형성되는 1백만~2백만의 가구가 가입해 프로그램 공급자 역시 수익분기점에 이를 전망이다.

사업초기연도인 95년에는 가입률이 8~10% 정도로 예측되며 매년 3~7%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.

박근애 기자